

투데이 칼럼

남북 군사 합의 논란

한 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 구도가 굳어지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계기로 우리 군 수뇌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정지 의사를 거듭 밝히고 나섰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9·19 군사합의는 남북이 지상과 해상, 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러나 그동안 북한의 습한 도발과 위반 조처로 사실상 빈껍데기만 남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렇지만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2018년 9월 19일 당시 남북 정상은 평양공동선언에 이은 부속합의로 9·19 군사합의를 이끌어냈다.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 상호 간 적대 행위를 하지 말자는 것이 합의의 골자였다. 특히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일정 거리 안에서는 포 사격이나 야외기동훈련, 항공기의 비행이나 무인기 이륙 등을 일괄 금지했다.

비무장지대 안의 감시 초소인 GP 22곳의 시범 철수와 관문점 JSA 내 병력의 비무장화, DMZ 내 유해 발굴을 위한 공동 지역 제정도 그 결과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9·19 군사합의는 존



정복구
논설위원

폐 기로에 섰다.

북한은 2019년 11월, 창린도 일대에서 해안포 사격을 하며 9·19 합의를 처음 위반한 데 이어, 2020년 5월에는 중부전선에서 우리 GP에 총격을 가했다. 지난해 12월엔 북한의 소형 무인기 5대가 침입하는 등 지금까지 무려 17차례 군사합의를 위반했다.

결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를 지시했다.

여기에 최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은 효력 정지론에 불을 붙였다. 한국군이 바라볼 때 북한의 최전방 화력 무기는 주로 산의 뒷면인 북쪽 기슭에 배치됐다.

북한 미사일을 조기에 탐지하려면 최대한 가까이 정찰비행을 해야 한다. 서부와 동부에 각각 20~40km에 이르는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돼 감시의 사각지대가 생겼기 때문이다.

연평도, 백령도 등은 해상완충

구역에 속해 해병대가 포 사격 훈련을 하려면 K-9 자주포를 육지까지 옮기는 일도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정찰기 등 중·고고도 정찰 수단인 우주해 감시 공백이 크지 않다.

북한에도 군사적 책대로 작용하는 점을 같이 봐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9·19 군사합의는 다양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자치 경찰과 전투력 손실단을 중시해 효력 정지에 나설 경우 다른 분야의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우려다.

일각에서는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한다는 것은 최후의 안전판을 제거하는 무책임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어느 조사에서 전염 세력과 지휘 세력까지 강력 응징하겠다고 선포했다. 어느 일방이 먼저 선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사태에 대한 책임을 모두 져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런 상황에서 9.19 군사합의에 얽매어 있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북한이 이미 합의를 위반하면서 합의의 기본 정신인 적대 행위 중단이라는 기본 큰 틀은 무너졌다. 때문에 이 합의를 우리가 계속 준수할 해야 되느냐 하는 고민을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반면 이걸 무력화하는 것은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3년 전에 군사합의를 백지화할 수 있다고 남측을 위협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격이 된다는 주장도 있다.

사실 북한은 고고도 무인 정찰기를 이미 전량화 했다. 미국의 U2 정찰기와 유사한 금강·백두 정찰기가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이미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물리적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도발은 설부터 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우리는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에 북한이 만약에 무력 도발을 할 경우 도발의 원점은 물론 지엄 세력과 지휘 세력까지 강력 응징하겠다고 선포했다. 어느 일방이 먼저 선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사태에 대한 책임을 모두 져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기고문

‘우리집에 소방관 있다’

전북소방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전라북도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156건이었으며, 사망자는 총 11명이었다.

그 중 주택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433건으로 약 20%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작년 화재로 사망한 11명 중 8명이 바로 주택시설에서 사망했다는 사실이다.

주택 시설화재는 20%밖에 되지 않지만, 왜 사망자의 72%가 주택 화재에서 일어났을까?

소방당국은 2016년 이래 매년 취약계층 대상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무 관련 홍보 등 많은 인력과 예산을 들여 적극적으로 홍보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 대비해 설치율은 그다지 높지 않다. 함께 이유를 살펴보자.

‘강 건너 불구경’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본 속담일 것이다. 자기에게 관계없는 일이라고 하여 무관심하게 방관하는 모양이라는 뜻이다.

재난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을 버리고 우리 모두 ‘만약 하나 ‘혹시’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국민들은 소방관들에 대해 좋은 인식을 갖고 있다.



김순정
무주소방서
예방안전팀장

때로는 소방관을 ‘영웅’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가슴이 뭉클해진다.

그런데, 단일 영웅이라고 부르는 소방관을 내방, 우리집에 항상 봐 둘수있다면 어떨까?

바로 주택용소방시설이 우리집

을 지키는 소방관이 될 수 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우리를 구조해주는 소방관과 같은 역할을 한다. 화재에는 뱀을 통해 긴급히 대피할 수 있어 목숨을 건질 수 있다. 소화기는 화재 시 우리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소방관이다.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초기진압에 큰 효과를 갖기 때문에 화재초기의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의 효과와 맞먹는다 한다.

위 내용을 보면 ‘주택용소방시설’이 우리집 안전을 지켜주는 소방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소방관은 소방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우리집 우리 일상에 소방관 ‘주택용소방시설’을 모두 설치하기를 바란다.

사설

어느 지자체의 주민소환 문제

도내 어느 지자체장을 둘러싼 주민 소환 문제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해당 지역 지회장이 서명 활동과 관련 “시민의 감정을 조정해서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모든 행동을 반대한다.”며 삭발식을 단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는 “지역의 청사진을 그리고 사업의 첫 삽을 떼야 하는 이 중추대해 시기에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행동으로 시민 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것은 지역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주민 소환제도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과 지방 의회 의원을 주민 투표를 통해 파면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대의민주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 중 하나다.

주민들이 지방 자치 체제의 행정 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투표에 의해 선출직 공직자를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국민 소환 제도라고 한다.

이 제도를 통해 주민이 지방 자치단체의 인사권을 가질 수 있다.

주민 소환 제도는 일정 수 또는 일정 비율의 유권자가 서명으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해임을 청구하면 선거를 다시 실시한다.

선거에 지면 공직을 떠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주민 소환 제도는 정치인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통제 수단으로 부패와 폐단을 견제하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다.

2006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7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장과 투표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시민이 진정 바라는 것은 소통과 화합을 통해 함께 잘 사는 지역을 만드는 것이다. 지역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같이 고민하는 지역이 되기를 주문한다.

여당의 쇄신안

여당이 기존 대표 체제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쇄신을 추진하고 있다. 새 당직자 인선에서 이른바 ‘천운’ 대신 계파색이 얕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 발탁됐다.

대표는 대통령과의 관계에서도 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긴급 의총에서 내년 총선 승리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했다. 하루 만에 새 당직자를 발표하며 2기 출범을 알렸다. 총선 공천 실무를 담당하는 핵심 보직인 사무총장에는 대구, 경북 출신의 재선 의원을 발탁했다.

정책위의장에는 수도권 3선인 의원을 임명했다. 모두 계파색이 비교적 얕다는 게 당내 평가다. 지명직 최고위원으로는 시각장애인 비례대표인 30대 의원을 임명하면서 젊은 층과 약자 배려에도 나섰다.

대통령실만 쳐다봐선 안 된다는 당 내외의 비판에 수직적 당정 관계 개선도 약속했다. 신임 당직자들의 상견례 자리에

서는 당이 민생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총선까지 ‘민생 앞으로’를 중심으로 당이 단합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는 데에 의결을 모았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구색 맞추기,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대표는 쇄신의 핵심으로 내년 총선을 겨냥해 수도권 인사 전진 배치를 강조했다. 그러나 핵심 보직인 사무총장 인선에서부터 논란이 일었다. 사임한 정책위의장이 유력했다가 발표 직전 다른 의원으로 바뀐 것이다.

당내에선 실망감이 터져 나왔다. 수도권 선거에 대한 긴장감이 떨어지는 영남 의원이라 우려된다는 것이다. 쇄신 안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대표의 강력한 혁신 드라이브에도 당 지지율이 하락하거나 수직적인 당정 관계에서 벗어 나지 못할 경우 당 대표 책임론은 계속해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